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12. 14 (수)	
		작 성 · 문 의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 송태복 / 사무관 서수철 (Tel. 044-200-2232)
<p>* 엠바고 : 즉시 사용</p>			

정부, 조류 인플루엔자(AI)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일일점검 체제 가동

- 황교안 권한대행, AI 민관 일일점검회의의 참석, 현장주체들의 책임방역 주문

□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14일(수) 아침,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‘조류 인플루엔자(AI) 일일점검회의’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참석하여 AI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.

* 참석자 : 농식품부장관, 국방부·행자부·안전처·환경부 차관, 질병관리본부장, 농림축산검역본부장, 시·도 부시장·부지사, 전문가

□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AI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,

○ 거점소독시설 미설치, GPS 미장착 차량운행, 가금농장 출입농장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 가금류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.

○ 그리고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것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로 하여금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,

-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AI 방역준칙 미준수,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여 AI 확산을 차단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- 정부는 12월 13일 일시 이동중지(Standstill) 명령을 발동하였고,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AI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AI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,
 - 이에 더하여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해서 AI에 대한 범정부적·민간합동·중앙·지방간 협업 대처를 가동 중에 있다.
-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특히,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가금농가, 업계 종사자 등 현장 주체들이 일시 이동중지, 농가 소독, 신속한 살처분 등 AI 현장 대응을 책임있게 실시토록 조치하고, 동 조치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해 주고,
 - AI 방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방역조치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책임지고 철저히 실시해 주고,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7가지 원칙을 함께 공유하여 대응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하였다.
-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단체 경기·충북·전남도 부단체장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.

- 산란계 살처분이 많은 경기도 포천의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방역 시설의 취약성, 외국인 인력 투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살처분 매몰현장에 필요한 인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열악한 오리 사육환경으로 인해 AI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가가 방역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·점검할 것을 당부하였고,
 - 영산강 주변 철새도래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철새에 의한 AI 전파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역초소나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- 황교안 권한대행은 AI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, 민간 전문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.